"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감감 무소식"

장연국 도의원,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발의
정부 자산운용 공공기관 이전 계획 마련 등도 담아

산업은행 부산이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같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선공약 즉각 이행과 최근 붉어진 금융위원장 전북무시 발언 사과, 정부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이전 계획 마련 촉구 등이 담겼다.

장연국 의원은 "관련법 개정없이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전북 몫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전북 이전 논의중인 한국투자공사 부산유치 조짐 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대통령, 국회의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과 국토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정부 농업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 법률 시행규칙

"전략작물직불제 핵심 취지 훼손"

김정기 도의원, "낮은 지원 단가 · 인센티브 불충분 등 내포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받은 농가는 지급대상서 제외"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쌀 재배 농가에서 쌀 대신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활용도의 제고, 벼 재배 면적 감축, 밀·콩 등의 자급률 상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밀한 설계 없이 도입되어 적잖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낮은 지원 단가와 충분하지 않은 인센티브 등도 문제지만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기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시행지침'을 하달했는데, 교차지급을 금지한 시행규칙의 규정 때문에 농가들이 전략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정기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기 의원은 교차지급 금지 규정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전략작물을 식재하고도 손실을 입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처사"로 "결국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들이 전략작물을 포기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도의 목표가 쌀 생산 감축과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에 있는데, 비현실적인 교차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 31일 정헌율 익산시장 2심 선고공판

일명 '이재명 판례' 따라 운명 결정될 듯?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헌율 시장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검찰, TV토론회 중요성 강조… 벌금 500만원 구형
정 시장 측, 1심판결 주된 이유 중심 항소 기각 요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1심은 정 시장에 대해 협약서에 환수조항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약서의 초과수익 환수조항' 존재 여부보다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 당시 임형택 후보자의 질문 취지와 정 시장의 답변 취지에 주목하며 "후보자의 질문에 부응해 당시의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적용된 일명 '이재명 판례'를 깨기 위한 작전을 폈다. TV토론회에서의 파급력이 큰 만큼 유권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발언을 해야하며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TV토론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뤄졌다"면서 "TV토론회는 정책을 설명할 때 고도화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인 입장에 판단해야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조항이 '환수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일반적인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사법적 통제기능은 대부분 상실됐다"면서도 "실제 협약서에는 환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춰볼때 이번 피고인의 발언(허위사실)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무분별한 허위사실 발언이 용납하는 결과를 낳고, 유권자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고도 덧붙이면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전체적인 토론회의 맥락', '선관위의 무혐의 처리', '이재명 판례' 등을 다시 한번 꺼내들어 맞섰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주제의 맥락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였다"면서 "실제 익산시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여럿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명시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간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분은 물론 어떤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법정에 섰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 시장은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뉴시스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양해석 도의원,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을 받는데만 수개월씩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은 지난 2008년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BF인증은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 더 상세하고 강도 높은 인증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승강기 설치의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계단,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BF인증에서는 2층 이상이면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 등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인증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현실적으로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9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인증절차에 있어 예비인증 및 본인증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든지, 인증기준은 있으나 그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심사위원에 따라 과도하게 주관적 심사가 이루어져 수정보완작업을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해 본인증을 받는 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여까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해석 의원은 "인증을 받는 데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비 및 공기지연에 따른 시공비용 등 예산초과, 준공지연 등 관계업체, 행정, 주민 모두에게 연쇄적인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보다는 오히려 제도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건의안에서는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증 심사기관을 지역별 거점기관으로 확대, △인증절차 단축 및 보완기간 포함한 인증평가기간 재규정, △인증평가기준 개편,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조사업 국비 지원, △건축 교육과정에 배리어프리설계 필수 포함 등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개원 10주년 태권도원, 여전히 외면받아"

문승우 도의원, "정부 태도 문제… 전북도 열패감도 한 몫"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권도원 활성화를 촉구했다.

2004년 개원한 태권도원은 2024년이면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권도원이 지나온 궤적을 보면 '지지부진'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주가 태권도원 후보지로 확정된 것은 2004년이었다. 당시 후보지 선정 결과가 알려지자 전 세계 태권도원의 성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이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희망고문을 넘어 피로감만 높이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태권도원 활성화의 핵심인 국기원 이전과 민자유치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와 열패감도 한 몫을 해왔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눈 뜨고 코 베이다시피 한 세계태권도연맹 이전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문 의원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도전'과 '실용'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유독 태권도원 활성화 앞에서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관영 지사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실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40건에 가까운 도지사 지시사항을 도청 내부에 하달했지만 여기에 무주태권도원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문 의원은 "역대 도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취를 김관영 지사가 성취해냄으로써 전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무주를 전북 제1의 국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방치형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시급"

송승용 도의원, 5분발언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송승용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1년 총예산액의 1.5배에 달하지만, 관리체계를 보면 대부분 현황관리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등이 저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활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 광역 또는 범정부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수입 경로로 떠오르며 전라북도 또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쏟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내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증가시켜 인구유출 등 해결을"

박정희 도의원, 5분발언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지난 26일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해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다"라고 직업계고의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대졸 임금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여전함 등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마이스터 4곳의 학교마저도 전체 취업자 340명 중 도내 취업자 60명(18%), 도외 취업자 280명으로 나타나 도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처럼 도외 취업자가 증가할 경우, 지역 인구 유출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 도내 생산량 감소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 도내 경제활동 둔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도내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 현상은 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인프라 활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복지 수준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해 성공할 기회 즉, 한시적 취업 장려금 지급과 이들이 취업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특히,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기업에게 도내 기업에게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